

30개월 이상 소 수출중단 요청 ... 美 어떻게 나올까

野 “중단 요청은 선거용 꼼수”

민주 ‘장외론’ 우세속 ‘등원론’ 대두

대선, 상·하원 선거 닥쳐 수용 어려울 듯

재협상 때도 FTA 자동차 양보 요구

美 수출업자들 ‘자율규제’ 해법 될 수도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3일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제한적 추가협상’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재협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과 쇠고기 업계가 수출자율규제를 하는 방안도 이번 상황을 타개할 주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 추가 협상 수용 여부= 일단 미국 외교와 통상 문제를 관장하는 부시인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은 정 장관의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민주, 공화 양 당의 후보들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정국 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하

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다시 선출하고 지역에 따라 주지사 선거까지 함께 실시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는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론 악화로 상·하 양원 선거에서 의석을 더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명백한 양보로 여겨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진통 끝에 쇠고기 재협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와 관련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자율규제방안 급부상=현재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고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업계가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발표를 하며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전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port restraint)는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이 알아서 스스로 수출의 수량이나 가격이나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부와 육류수출업체가 이 상태로는 어차피 한국으로의 정상적인 쇠고기 수출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스스로 기간이나 조건을 정해 “30개월이상 쇠고기는 한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수입위생조건을 손대지 않더라도 30개월 유효 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미국 측이 수출 자율규제를 결정한다고 해도, 정부-업계 간의 약속 이행 보장 방식, 미국 업계 통제 방안 등을 담은 수출자율규제협정(VRA: 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을 따로 체결할지 등도 협의해야 한다.

만약 명문화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한국인의 우려와 반발이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율규제협정 방식=특정 조건이나 수량을 수출국 업체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으로, 흔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같은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지난 81년 미국과 일본 간에 맺은 자동차 자율규제협정과 84, 89년 한국과 미국 등이 체결한 철강 자율규제협정이 대표적이다.

한 ‘쇠고기 재협상 결의안’ 수용

“야당은 국회 돌아와 민생현안 살펴야”

한나라당은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관련, 야당이 주장한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운선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단 마음을 헤아리는게 국회의 도리이다.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6월 국회는 고유가,고물가를 해결하는 민생국회”라며 “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 현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야당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수용기로 한 것은 18대 국회 개원 협

상을 거부하고 5일 예정된 개원식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을 국회내로 끌어들여 ‘쇠고기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관보 게재 연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용 등 우리는 야당의 주장을 거의 다 들어줬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국회로 들어와 여야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찾겠다고 야당에 말했다”면서 “이는 나서지 못하는 일을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협상 촉

구 결의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긴급 현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쇠고기 대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시작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개월 미만인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고 광우병 발생시 지체없이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야권의 재협상 주문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연합뉴스

버시바우 “재협상 필요성 못 느껴”

정부는 3일 미국 업계가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전 쇠고기 수출을 자제하도록 미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느낀다”며 사실상 재협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지만 추가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버시바우 대사와 회동, 미국 업계가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전 쇠고기 수출을 자제하는 등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요청을 분국 정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으며 추후 미 정부의 입장을 우리측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논란과 관련, “4월에 이뤄진 한·미 간 쇠고기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잘 이뤄졌으며 합의의 행을 연기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 조이트레블
대표 전화 (062) 234-3222

입문 - 300만원
299,000

중급 - 400만원
399,000

고급 - 500만원
429,000

가족장 - 549,000
459,000

대인장 - 279,000

신착순 한정 특가행사!

북경 / 만리장성 329,000 (4월)

북경 / 만리장성 369,000 (5월)

북경 / 동명대학성 무제한골프 399,000 (4월)

상해 / 항주 / 황산호 469,000

상해 / 항주 / 황산호 499,000

정사 / 장가계 / 천가계 549,000 (4월)

상해 / 항주 / 단풍 629,000 (4월)

간이대리일주 8일 1,890,000

간이대리일주 6일 1,890,000

제주도 장가투어 패키지 3일 239,000

미국비자 / 중국비자

비자담당처 문의 : 062-233-5900